

"근골격계 질환 '추정의 원칙 법제화'로 신속한 산재처리 보장하라" 규개위 앞 긴급 행동

✎ 조연주 기자 | © 승인 2022.03.11 17:04

민주노총, 규개위 심의 앞서 서울정부청사서 긴급 대응 행동



민주노총이 추정의원칙 개정안 심의를 앞둔 규제개혁위원회를 향해 조속한 추정의원칙 법제화를 요구하며 서울정부청사서 11일 긴급 대응 행동에 나섰다. © 조연주 기자

근골격계 질환 산재를 보다 신속히 처리하는 내용의 '추정의 원칙 개정안' 심의를 앞둔 규제개혁위원회를 향해 민주노총이 추정의 원칙 법제화로 신속한 산재처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가맹산하 조직이 추정의 원칙 개정안과 관련한 규제개혁위원회가 열리는 11일 오후 1시, 서울 정부청사 후문에서 선전 전 및 긴급 대응 행동을 벌인 것이다.

추정의 원칙은 명백히 작업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질병과 작업에 대해 일정 기간 작업경력이 인정 될 시, 재해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질병판정위로 넘겨 업무 관련성 여부를 심의하는 내용의 제도를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산재 승인율이 높은 근골격계 질환을 두고,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현장 재해조사 과정을 생략하고 신속하게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개정안을 예고한 바 있다.

노동부가 추정의원칙을 보다 현실적으로 개정하려는 배경에는 민주노총의 투쟁이 있었다. 지난해 민주노총은 산재 처리 과정이 법의 취지와 맞지 않게 지나치게 오래걸려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산재처리 지연문제 해결을 위해 세종시 노동부 앞에서 72일간 농성하며 핵심 요구 중 하나로 '추정의 원칙' 확대 및 법제화를 들었다.

농성 투쟁 과정에서 노동부와 산업별·직종별로 반복되는 직업병에 대해서는 당연인정을 신설하는 추정의 원칙 확대와 법제화를 요구했고, 노동부는 민주노총과 합의해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노총이 추정의원칙 개정안 심의를 앞둔 규제개혁위원회에 향해 조속한 추정의원칙 법제화를 요구하며 서울정부청사에서 11일 긴급 대응 행동에 나섰다. © 조연주 기자

근골격계 질환은 직업성 질병 중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질환으로, 2017년 5127건에서 2021년 1만244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 행정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재해노동자는 산재신청을 포기하거나, 제 때 치료받지 못해 악화되고 있다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2020년 심의현황 분석에 따르면, 질병판정위원회가 한 해에 다룬 심의 건수는 1만4422건으로, 각 6개 위원회가 평균 2400개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65일 위원회를 연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 6.5건을 심의하는 셈이다. 정확하게 산재가 심사될 수 없는 구조이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산재 인정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노동자의 빠른 치료와 조속한 업무 복귀를 목적으로 7일이라는 제한을 걸어뒀지만, 이 7일이라는 기간에는 재해 조사나 보험 의견 제출 등의 행정기간이 포함 돼있지 않아 평균 한 달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산재 처리가 늦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이 산재로 인정되도 사업주에게는 추가로 부담되는 금액이 없지만, 경영계는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면, 무분별하고 불합리한 산재 승인이 늘어날 것이라며 무작정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실제 업무 부담은 높고 근골격계 질환 발생이 있음에도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이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면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신속하고 지속적인 연구로 개정고시안의 적용대상을 적극적으로 정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이 추정의원칙 개정안 심의를 앞둔 규제개혁위원회를 향해 조속한 추정의원칙 법제화를 요구하며 서울정부청사에서 11일 긴급 대응 행동에 나섰다. © 조연주 기자



민주노총이 추정의원칙 개정안 심의를 앞둔 규제개혁위원회를 향해 조속한 추정의원칙 법제화를 요구하며 서울정부청사서 11일 긴급 대응 행동에 나섰다. © 조연주 기자



민주노총이 추정의원칙 개정안 심의를 앞둔 규제개혁위원회에 향해 조속한 추정의원칙 법제화를 요구하며 서울정부청사서 11일 긴급 대응 행동에 나섰다. © 조연주 기자



민주노총이 추정의원칙 개정안 심의를 앞둔 규제개혁위원회에 향해 조속한 추정의원칙 법제화를 요구하며 서울정부청사서 11일 긴급 대응 행동에 나섰다. © 조연주 기자



조연주 기자 nojojogirl@gmail.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